

主 題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통신정책과장 천 창 필

차 례

1. IMF체제의 극복과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2.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과제
3. 맺음말

1. IMF체제의 극복과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최근 우리경제는 개발연대에서 비롯된 고비용·저효율의 비능률적인 경제구조와 외환부족사태로 촉발된 환율급등, 실업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순환 국면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표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체질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는 '80년대 후반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술개발을 통한 투자생산성 향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을 등한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경상수지흑자는 수출증가가 아닌 수입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투자감축·투자효율성의 지속적인 저하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여 주고 있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한계고정자본계수(단위 생산증가에 소요되는 투자)는 '96년 2.8, '97년 3.8, '98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 우리 나라 산업의 효율성 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대 만
'87~'95년 제조업 평균임금상승율	9.1%	1.4%	△1.0%	6.6%
물류비/매출액('95)	14.3%	8.8%	7.7%	

자료 : 재경부, 산자부

<표 2 :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

	단 위	'96	'97	'98
총투자	조원	149.8	147.2	98.5
국내투자율	%	38.8	35.3	22.2
경상수지	억불	-237	-88	329
실업자수('98. 6월 현재)	천명	425	556	1,529
실업율('98. 6월 현재)	%	2.0	2.6	7.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확대가 시급하며 원활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구조개혁의 핵심수단인 정보화의 공급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수출확대, 외자유치를 통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혁이 핵심수단이며 이러한 정보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주요기반이 정보통신산업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고도 성장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지난 5년간 타 산업의 2~3배인 평균 29.8%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에도 연평균 13.9%정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셋째, 정보통신산업은 수출증가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98년

139억불, 2002년 340억불 흑자 예상)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보통신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여 '97년 93만명에서 2002년 13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순증 43만 8천명)이며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보통신산업은 기술혁신과 경쟁도입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다. '97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은 4.5%였으나 통신서비스요금은 2.9%인하되었고, '97년 생산자물가상승율은 3.9%였으나 정보통신기기의 가격은 2.5% 감소하였다.

미국 상무부에서 '98. 4월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향후 미국경제의 주축이 되어 미국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92년 26%, '95년 41%, '96년 35%, '97년 28%로 지난 5년간 실질경제성장의 1/4이상 기여한 것으로

<표 3 : 정보통신산업의 주요지표 현황 및 향후전망>

	단위	'96	'97	'98	'99	2000	2001	2002	'98~2002평균
생산증가율	%	21.1	23.7	21.6	10.8	12.7	15.5	16.8	13.9
GDP 비중	%	8.8	10.0	11.5	11.9	12.3	13.0	13.8	-
무역흑자규모	억불	100	94	139	186	231	279	340	1,175(누계)
신규고용창출	천명	-	64	29	61	90	117	140	438(누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분석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전체는 '77년 4.2%, '90년(PC보급) 6.1%, '98년 8.2%(예상)로 GDP의 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에는 74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용자가 '98년 1억명에서 2005년 10억명으로 증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2002년까지 연간 3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육성 정책과제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 고용, 수출 및 물가안정을 주도해온 국가전략산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맥킨지보고서(표 4에 요약정리)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개혁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

(미국 1995=100)

	'95년	2010년		
		구조개혁 안함	금융 및 제조 업만 개혁	서비스 포함 개혁
노동생산성	64	85	90	120
자본생산성	58	50	75	110

자료 : 맥킨지 보고서

따라서, 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보통신부는 우선 정보통신기업들이 IMF경제위기하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이 무엇인가를 파악, 시의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구조개혁을 위해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개방된 정보통신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완화,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정보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의성이 있는 기술전문인력양성과 대외경쟁력있는 첨단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World-best 기업, 기술, 인력만이 양성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정보통신업체의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마련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98. 5. 20, 5. 27에 (주)팬택 등 6개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업계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98. 5. 15 ~ 21일, 71개의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및 S/W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서면조사하였다. 또한 '98. 6. 11 ~ 6. 22,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정보통신서비스, 기기, S/W업체 등 지역 대표기업인 25~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기 업체는 시장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금리로 인한 자금확보가 곤란(특히 중소기업체)한 것으로 밝혀 졌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IMF 기간동안 허가부문, 권고부문 연구개발출연/투자부담의 이연 또는 경감, 특히 연도별 출연금은 이익발생시까지 유보를 건의하고, 전파사용료 부담 경감과 이동전화사업자간의 과당경쟁 방지조정을 건의하였다. 패키지S/W 업체는 자금 부족, SI업체는 수요 위축, 멀티미디어컨텐츠 업체는 유통부문의 취약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소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체신금융자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사채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98년 반전자교환기 교체(31.5만회선), 시외교환기(No.4 ESS)의 국산교체(14.7만회선) 등 추가로 한

국통신의 신규 투자수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위해 5개 사업자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확보 및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8년 출연금 납부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소프트웨어(S/W)벤처기업 등에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인력양성 : 110억원, 기술개발 : 790억원, 기반조성 : 100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발전 기반을 확대키로 하였다.

나. 정부규제 완화로 자유로운 경쟁체제 마련

최근 세계정보통신시장은 내·외적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WTO체제의 등장으로 정보통신시장의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서비스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금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을 인가제로 완화하고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따른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사용권 승계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시장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이 일반경쟁시장과 상이하므로 별도 전문규제기관이 필요하며, 미국은 처음부터 통신사업 공정경쟁 감시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경쟁도입과 동시에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 통신사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91년 국제통신사업에서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경쟁이 개시되었고, '96년 다수의 PCS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허가를 획득하여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전문규제기관으로서 통신위원회의 기

능을 강화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과징금제도를 현실화하여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통신사업 겸업제한 완화를 위해 단말기 판매업 등 불공정경쟁의 폐해가 있는 경우(예 : 단말기제조업)를 제외하고는 현행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경쟁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신고원칙, 인가예외」규정에 따라 공정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요금만을 인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은 신고제로 완화되었으며,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요금은 유효경쟁이 가능한 시점부터(2000년경)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통신설비투자비의 절감과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기지국 공동구축, 통신망 공동이용(예: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 등 사업자간 협력활동을 유도·지원하고 있다.

다. 시장개방촉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97년말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외국인 총투자자는 약 14억불(서비스 2억9천만불, 정보통신기기 9억5천만불, S/W 1억4천만불)이 유치되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 '98년까지 5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외자유치를 위해 법제도를 금년중으로 다음과 같이 정비할 예정이다. '98년내 동일인 지분한도를 폐지(현재 유선통신사업 10%, 무선통신사업 33%)하여 국내 통신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99년에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현재 유·무선통신사업 33%)하고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국통신은 연내 경영개선 비전 제시후 정부보유주식의 매각과 해외 DR발행을 추진하고 지분한도도 확대하여 금년중으로 현재

3%인 동일인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고, 20%인 외국인 지분한도는 33%로 확대하여 외국의 우수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98년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무선국 허가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주문형반도체, 정보통신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아시아 공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외국인투자진흥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의 외국인 합작·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에 외국인투자 상담관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산성 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외국 일류회사와 공동으로 '98~2000년 약 4조4,100억원으로 전망되는 공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전산운용업무는 외국전문회사에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국제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98년 120억원)하여 상용화단계에서 파생되는 합작기업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우수인력, 아이디어의 활용에 관심이 있는 외국일류회사와 국내업체 컨소시엄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전산운용업무를 외국전문회사에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S/W진흥구역을 외국인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패러다임의 전환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와 같은 세계일류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000여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공간, 고가장비 및 S/W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S/W·멀티미디어콘텐츠·주문형반도체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시설 및 공간을 제공(98년 164억원 출연)하고 있다. '98년중 S/W지원센터를 2개지역에 추가설치하였다.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창업,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S/W업계 등 중소벤처기업의 Marketing 능력제고를 위해 생존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지양하여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기술력 등 생존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자금·판로·경영활동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는 벤처기업 투자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처기업의 90%가 실패할 정도로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부재원에서 직접투자하기보다는 정보통신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설립(98년 100억원 규모)하고, 외국투자전문기관, 해외교포벤처기업 등과 합작으로 정보통신기업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창업단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공간, 고가장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였고, 창의적 아이디어 집단인 대학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과 창업동아리의 우수창업아이템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8년 85억원을 출연하여 대학의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를 '98년 20개소로 확대('97년 10개소)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보통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인력집단인 대학의 창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설비구입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98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4,140억원)의 76%인 3,146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한다. 영세S/W업체의 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한 공제사업도 '98년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5,237억원의 대출 및 보증지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정보통신산업의 수출확대 지원

정보통신분야의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왔다 (반도체 제외시 '96년 22%, '97년 18%). 그러나, '98년 상반기에는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IMF위기로 인해 수출이 전년 상반기 대비 1.2% 감소(반도체 제외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이외에도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우리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보통신산업정책을 반성하여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IMT-2000 단말기, xDSL 장비, WLL 장비, 평판디스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디지털TV, ASIC 등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연계시키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향후 정보통신부에서는 정

보통신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처하고자 한다.

현재 수출촉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설비 플랜트와 같은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진출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연불수출금융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관련장비의 수출시 발주처로 부터 Vendor Financing 제공여부가 주요 경쟁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uyer-Credit, Project Financing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업체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체신금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수출, 합작공장,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체신금융자금 지원(97~99년 : 1조 원)과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일반은행의 수출금융 취급에 대해서도 체신예금자금을 예약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둘째, 핵심부품과 원천기술의 외국의존이 높아 수출효과가 반감되고 선진국의 로열티 인상시 제품

<표 5 : 정보통신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 %)

구 분	'97 상반기			'98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증감율)	수입(증감율)	수지
통신기기	1,264	1,156	108	1,596(26.3)	680(-41.2)	916
정보기기	2,597	1,238	1,359	2,316(-10.8)	639(-48.4)	1,677
방송기기	95	46	49	259(172.6)	61(32.6)	198
일반부품	2,619	1,939	680	2,341(-10.6)	1,326(-31.6)	1,015
반 도 체	8,115	6,172	1,943	7,985(- 1.6)	5,872(- 4.9)	2,113
S/W	35	188	-153	18(-48.6)	84(-55.3)	-66
합계 (반도체제외)	6,610	4,567	2,043	6,530(- 1.2)	2,790(-38.9)	3,740
합계 (반도체포함)	14,725	10,739	3,986	14,515(- 1.4)	8,662(-19.3)	5,853

자료 : 관세청, ETR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부담이 큰 주요 부품의 조기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핵심 칩, 광통신 소자, 2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을 중점 개발하여 국산화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 표 6 : CDMA 단말기 국산화 목표 >

구분	'97년 현재	'98년 현재	2000년
국산화율	30%	55%	75%
대상품목	PCB RAM	CDMA 핵심칩	SAW 필터 듀플렉스 등 RF 부품, 2차전지

* 현재 CDMA 핵심부품 개발, 리튬 고분자 2차전지 기술 연구, HDTV 핵심칩 개발 등 수행중

핵심부품 개발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8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출연 및 융자 사업) 시행시 핵심부품의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개발사업 등에 중소기업 참여 및 부품개발 비율을 확대하고, ASIC공동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원사업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시 부품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국책과제(IMT-2000, ATM, 디지털방송 등) 수행시 핵심부품 개발을 필수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수출 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전략 품목을 발굴·지원('98년: 400억원)하고 있다.

셋째, 해외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초청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선진기술의 국내보급을 도모하여 수출유망상품 개발을 유도코자 국제정보통신 최고전문가 초청교육을 확대('98년 5억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등의 국외연수 지원('98년 200명 연수, 20억원)을 통해 수출인력을 양성하는 등 수출에 필요한 인력정책을 펴고 있다.

넷째,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수출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 S/W업체의 해외진출 및 수출전진기지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치된「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98. 4. 24에 개소하여 10개

국내S/W업체가 입주('98년 하반기 5개업체 추가 입주 예정)하였다.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현지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내 상품정보의 해외전파와 중소기업들의 해외지점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전문가 및 협력기관을 알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진흥사업을 추진('98년 15억원)하기 위해 S/W지원센터내에 소프트웨어 수출진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국 컴덱스, 일본 비즈니스쇼, 독일 Cebit, 호주 전자통신박람회 등 시장개척을 위해 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98년 3억원 이상)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관련 정보의 DB화, 인력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마켓('97. 12월 서비스 개시)을 통한 인터넷 광고 등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영문 번역 확대 및 일어 번역을 추진중이다.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통한 자금지원('98년 200억원)을 하고 S/W 수출계약서를 담보로 자금대출(이자율 : 10%)과 국제 S/W 계약시 이행보증을 추진(수수료율 : 0.4~0.5%)하고 있다.

다섯째,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98년 싱가포르, 중국 등 수출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통신협력위원회, 통신장·차관회담, 고위인사 교환방문 등 정부차원의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98년 TDx, CDMA, 등 4개 과정에 30여명 무상훈련 및 유상교육과정시설을 추진하여, 개도국 정보통신인력의 기술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나라의 우수한 제품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제품의 홍보 강화 및 수출 관련 정보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제품의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여시 부스,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추진('98년 2.5억원)하고,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외국 바이어 유치를 위한 기술발표회와 인터넷 거래알선 시스템(KOTRA), 중소기업 상설 전시관(중소 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 기술정보센터(ETRI) 등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및 기술 홍보 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OTRA, KISDI, ETRI, S/W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을 위한 해외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 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 촉진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쟁체제를 정착시키고 창의성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세계일류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2002년에 정보통신산업분야 세계 5위권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장수요중심의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세계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기술분야를 선별하여 중점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IMF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97년 4,200억원(출연 1,650억원, 융자 2,65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규모를 '98년 5,319억원(출연 1,739억원, 융자 3,580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체제의 확립에 있다.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출연으로 지원하고 투자위험이 큰 기술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개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반기술연구 기능 및 중소기업과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체제를 바탕으로, World-best 기술로서 우리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해외시장진출이 가능한 광통신, 광대역이동통신,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S/W, 디지털 방송 등과 같은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시장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에 대한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활동의 생산성 제고 및 복지정보통신사회 구현에 필요한 기반성과 공공성이 높은 CALS/EC, 원격교육/의료,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목표지

향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보통신분야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중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을 '97년 10%에서 '98년 20%로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과 정보통신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 전문인력 양성

오늘날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대학이라는 두뇌중심지와 지속적인 협동을 통해 그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체화된 창의적인 고급기술 인력의 양성·확보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97년 594억원→'98년 900억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통신분야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전문인력의 직접적 수요처인 산업체의 자체 인력양성 지원을 위하여 대졸이상 고학력실업자의 정보통신재교육을 지원하고('98년 1,750명),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 재직근로자의 정보통신분야 교육훈련비를 지원('98년 7,000명)하고 있다. 또한, 미취업 대학(원) 졸업생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턴사원으로 채용시 훈련비를 지원('98년 100억원, 3,300명 고용효과)하는 등 S/W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 추가지원하고, 실직자 일자리 마련과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부부문서 및 기록자료의 전산화 등 「정보화근로사업」을 시행중이다. 정보통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고('98년 84억원 1만명), 기간통신사업자의 교육훈련과정을 신규통신사업자에 개방('98년 700명)하여 정보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 군장병, 신세대 등 정보통신 저변인력 육성을 위하여, 여성전문교육기관의 S/W, 영상, 콘텐츠 등 여성적합교육을 지원하고('98년 1만명) 여성

전문인력 DB구축·활용하며, 군장병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우수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급기반 확충에 주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우수대학원, 시범전문대 및 실업계고교를 선정하여 실험실습기자재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의 교수요원 Pool 구성, 연구전담교수 채용기금을 지원하여 우수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대학 등 정규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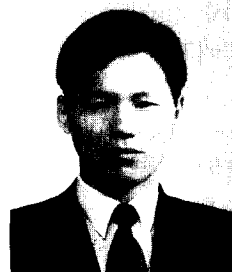
3. 맺음말

현재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자본주의 성숙에 의해 국경없는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World-best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다. 또한 아시아 각국과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국민의 생활의 질이 매우 낮아졌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경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필요하다.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친 저효율의 낡은 구조를 깨뜨리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기반사회(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에서 정보통신부문은 새로운 일자리 마련, 수출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로 실업문제 해소와 외환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경쟁력 향상과 개방된 세계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보호도 점차 줄어들 것이며 기업은 투자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감수하여

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지원시책도 벤처기업등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방식보다는 세제제도개선, 기술금융회사등 투자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력있는 세계적·창의적 정보통신전문기업이 창업·육성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업도 생존차원에서 수익성 높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계시장에서 기술우위와 뛰어난 경영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내기업이 많을 수록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최고수준의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대열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IMF는 우리의 현실과 취약점을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이다. IMF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육성의 비전과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산업정책을 재정립하고, 기업과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앞으로 IMF체제 극복과 더불어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천 창 필

서울대학교 농경제과 졸업

서독 뮌헨대 수학

국제위성통신기구(INTELSAT)파견근 / 현 정보통신정책과장